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62-14





발간사

도시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더디게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 행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여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중소병원, 공장 등에서 사용 중인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완화하여 사용편의 증진과 행정절차 부담을 덜어드리고, 3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수목원으로 탈바꿈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감성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담은 이번 사례집은 앞선 사례들을 포함하여 경제 활력 제고, 시민 불편 해소, 적극행정 사례 등도 담았습니다. 시민·기업 등과 소통하고, 시와 구군의 협력,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흔적들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내용들이 공식사회에 널리 알려져 규제혁신과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불편과 기업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바꾸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 선진도시가 되도록 멈춤없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온 힘을 쏟아 시민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목차

CONTENTS



PART 1

경제 활력 제고

1.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COVID19 대응력 향상	8
2.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도가공업 입주 허용	9
3. 종합평가 낙찰제의 시공품질 평가 방법 개선	10
4. 안전한 드론 조종 환경 조성을 위한 자격기준 세분화	11
5.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개선	12
6. 공장등록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생략	13
7.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제도 개선	14
8. 관행적인 준용(準用)은 이제 그만,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	15
9. 발길 줄어든 지하도상가,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위기 극복	16
10. 해외에 의존하던 부산영도대교 도로포장, 국내 특허기술로 해결	17
11. 생극 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구축으로 에너지 자립화 실현	18
12. 집단급식소 영업승계시 신고 절차 완화	19
1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벽보게시판 운영방법 개선	20
14. 소상공인 살리는 민락수변공원 야외 거리두기 프로젝트	21

PART 2

시민 불편 해소

15. 임신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부여	23
16.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	24
17.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봉인 재발급 허용	25
18. 방치된 행정재산(토지)의 상호교환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및 보행로 개선	26
19. 해운대해수욕장 및 동백섬 일원 전통키보드 서비스 RED ZONE 지정	27
20.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해양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28
21. 담당자 연결 전화바로걸기 서비스 실시	29
22.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푸드마켓 확대 운영, '친구네 곳간'	30
23. 방치된 미사용 경로당, 지역주민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한 '감동드림 빨래방'	31
24. 수원지 보호 vs 보행권 보장의 중재로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	32
25.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33
26.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34
27. 365일 연중무휴 빈틈없는 초등돌봄교실 모델 구축	35
28.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36

PART 3

기타

29. 「KT 지중화 사업비」 분담 협약 체결	38
30. 계곡수 유입을 통한 지방하천 수질 개선	39
31. 테이크아웃컵 회수 체계 구축	40
32. 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최초 시행	41

PART 4

적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33.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및 가덕신공항 건설 토대 마련	43
34.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무상임대 공간 확보 및 외국계 금융기업 6개사 유치	44
35. 초고령화 도시! 부산에 전국 최초로 등장한 출산장려 택시!	45
36. 전국 최초, 임시격리(생활)시설 민간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추진	46
37. 공원일몰제 위기 「생태의 보고 이기대」 보전녹지지정으로 난개발 방지	47
38.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48
39.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유도선 사업 영업구역 확대	49
40. 온천천 물고기 폐사 경보제 시행 제안	50
41.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의 친환경 수목원 조성 추진	51
42. 내부순환(만덕~센텀) 대심도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협의체로 소통 해소	52
43. 규제혁신을 통한 국내대표 이커머스 쿠팡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유치 성공	53
44.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버팀목 마련	54
45. 더파크 동물원 민사소송(매매대금 500억청구) 승소 및 동물원 정상화 추진	55
46. 생명의 문을 지켜라! 전국 최초 민간협업 공동주택 피난안전환경 조성	56
47. 건설사업장 임시검사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 추진, 코로나19 확산 차단	57
48. 전국 최초, 지역건설산업 활로 개척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 일감 확보 및 하도급 수수 확대	58
49.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전국 배포	59
50.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전국 표준가이드 마련, 생명골든타임 확보!	60

부록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62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64

PART 1

경제 활력 제고



1.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COVID19 대응력 향상
2.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3. 종합평가 낙찰제의 시공품질 평가 방법 개선
4. 안전한 드론 조종 환경 조성을 위한 자격기준 세분화
5.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개선
6. 공장등록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생략
7.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제도 개선
8. 관행적인 준용(準用)은 이제 그만,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
9. 발길 줄어든 지하도상가,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위기 극복
10. 해외에 의존하던 부산영도대교 도로포장, 국내 특허기술로 해결
11. 생곡 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구축으로 에너지 자립화 실현
12. 집단급식소 영업승계시 신고 절차 완화
1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벽보게시판 운영방법 개선
14. 소상공인 살리는 민락수변공원 야외 거리두기 프로젝트

01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COVID19 대응력 향상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601)



개선배경

- 중·소형병원, 철근 절단 및 용접 작업이 수반되는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 산소호흡기 및 수조관, 공장설비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산소액화가스*(산소통)를 상시 사용하고 있음
 - 산소통은 사용 편의를 위해 최소 2대의 저장용기가 필요하나 2대 보유 시 신고대상 기준(250kg)에 해당되어 사용신고는 물론 교육, 기록·점검 등 엄격한 기준에 따른 여러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되므로, 기본 용기 1대(예비용1대)만 사용하면서 잔여 산소가 있음에도 교체를 하고 있어 어려움 큼
- * 산소액화가스 용기 저장능력 168kg(175ℓ)

개선내용

개선 전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 기본용기 2대 사용할 경우 신고대상
- 168kg × 2대 = 336kg

개선 후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
- **기본용기 2대 사용할 경우 신고없이 가능**
- 168kg × 2대 = 336kg

추진과정

- 부산시 현장규제신고센터 애로사항 접수·상담, 실태조사 추진(요양병원, 수산도매업 등)
- 액화산소통 안전성 등 현황 조사, 관계부서와 개선과제 적정여부 협의
- 단체·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에 안건 상정, 개선안 마련
- 규제개선 건의(부산시 → 산업통상자원부)후 지속적 협의 추진
-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
- 소상공인 및 기업체의 산소액화가스 사용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 업무부담 해소
- 산소액화가스 등의 사용신고 범위 확대에 미신고 불법행위 근절

개선효과



02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추진부서 해운항만과 (051-888-7647)

개선배경

국내의 원자재 및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가 부산신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입주 제한 규제로 무산되는 사례 발생

* 수출·물류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전국 13개 지정운영)

개선내용

개선 전

《자유무역지역》

-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제한

개선 후

《자유무역지역》

-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가능**
- (조건) ① 전량 재수출 ②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③ 보세사 채용 등

**63개 양허관세 품목으로 국가간 가격차가 상당해 수입 시 관세부과(소고기, 분유, 마늘 등)

추진과정

-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종 입주 제한 관련 업계에서 건의(2018.2.)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관계부처* 간담회(2018.11.)에 안건 상정, 입주제한 품목을 제한적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관계부처 협의
*부산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관세청, 농림식품부, 기획재정부, BPA, 업계 관계자 등
- 법령 개정 전 입주희망기업은 세관 협의 통해 해결방안 모색
- 국회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임기만료 폐기(2019. 6.), 재발의(2020. 6.)
-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협약' 체결,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회' 구성
- 자유무역지역(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법·제도 개선 공동건의(부산·경남·전남)
-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1. 6.)



· 커피 원두 가공업 등 고부가 농축산물 제조·환경 조성으로 수출 확대 기대

· 부산신항 배후단지 활성화로 국내외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기여
- 660억 원 투자유치, 240여 명 일자리 창출



03 종합평가 낙찰제의 시공품질 평가 방법 개선

추진부서 건설행정과 (051-888-2634),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592)

개선배경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시공품질평가*에 반영)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

* 시공평가는 1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 중소기업체는 시공평가 점수 보유가 곤란

※ 기존에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공품질평가 예외규정상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20.12.31.)

개선내용

개선 전	▶▶	개선 후
《시공품질평가 방법》 ·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과거 준공한 100억원 이상 공사 평가		《시공품질평가 방법》 ·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업체는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예외 규정 마련

추진과정

- 지역 중소기업체의 입찰관련 애로사항 청취, 규제 개선 건의(부산시→행정안전부)
- 종합평가 낙찰제의 시공품질 평가 항목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1. 9.)

개선효과

- 지역 중소기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 기회 확대

04 안전한 드론 조종 환경 조성을 위한 자격기준 세분화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604)

개선배경

- 드론 조종 자격증 제도는 기체 중량별 세분화 없이 12kg 초과 사업용인 경우만 자격증 발급을 하고 있음
- 최근 드론 이용자의 증가로 드론 사용 목적이 완구용부터 산업용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사전지식 없이 비행함에 따른 안전사고 빈발하여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개선 후
《드론 비행 조종 자격증》 · 기체 중량 12kg 초과		《드론 비행 조종 자격증》 · 기체 무게를 1종~4종까지 세분화(신설) - (1종) 25kg 초과~150kg - (2종) 7kg 초과~25kg 이하 - (3종) 2kg 초과~7kg 이하 - (4종) 250g 초과~2kg 이하

추진과정

- '2018 드론쇼코리아' 행사장 내 운영된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건의·접수(2018. 1.)
 -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하여 드론 이용자 증가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규제개선 추진 (부산시→국토교통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5.)

개선효과

- 드론 취득 목적에 맞는 지식습득을 통한 드론 운용으로 안전 사고 방지에 기여



05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개선

추진부서 도시계획과(051-888-2452),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604)

개선배경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는 2019. 6.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만㎡ 이상인 결정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소방·건축 등 심의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자문결과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이전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되므로 절차에 따른 시간, 비용이 증가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 추진 애로

개선내용

개선 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 (대상) 1만㎡ 이상 결정 의제되는 주택 건설 사업 전체
- (시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



개선 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 (대상) 1만㎡ 이상 결정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 전체
- (시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 **(자문제외대상 신설)** 모두에 해당될 경우
 - 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일 것
 - 용도지역 중세분사항의 변경이 없을 것
 -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심의 대상이면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일 것

추진과정

- 현장규제신고센터로 규제 건의·접수, 규제개선 과제 검토(규제혁신추진단, 도시계획과)
 - 소관부서(도시계획과), 협회 등과 실무회의를 거쳐 현장 의견 반영, 개선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개선



- 건축, 토목, 구조, 조정 등 각종 실시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불편사항 해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요기간(6개월~1년) 단축과 소요비용 절감 기대



06 공장등록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생략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604)

개선배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개정(2009. 6.30.)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제2종근린 생활시설(제조업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나, 「공장입지 기준 고시」가 변경되지 않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공장등록 가능하여 기업 애로 해소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500㎡미만 공장등록시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후 가능



개선 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500㎡미만 공장등록시 용도변경없이 가능**

추진과정

- 현장규제신고센터로 기업(협회) 애로 사항 접수, 현장 실태조사
 - 규제개선 건의(부산시→산업통상자원부)와 현장상황 등 지속적 협의 진행
- 「공장입지 기준 고시」 제7조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적용 가능,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500㎡ 미만 공장등록 신청 시 용도변경없이 가능



- 공장등록에 필요한 소요시간(7일~14일) 단축과 용도변경의 용역비용(건당 100~200만원) 절감
- 기업 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도 향상

07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제도 개선



추진부서 기장군 해양수산과 (051-709-4502)

개선배경

- 대구 어종의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부산, 경남 지역은 1월이나 그 외 전 지역은 3월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구 어종의 제철인 매년 1월은 기장군 어업인에게는 조업이 불가하나, 인접지역의 어업인은 가능해 법정 해상경계가 없어 타 지역 어업인과 갈등 초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개선내용

개선 전

《대구 포획·채취 금지》

- (기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예외) 다만,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선 후

《대구 포획·채취 금지》

- (기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 (예외) <삭제>

추진과정

- 지역 어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의 불합리함을 지속 건의
 - 해양수산부 방문 건의,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개선 간담회*를 통해 금지기간 일원화 요청
 - *해양수산부, 기장군, 어업인
- 대구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일원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21. 1.)

개선효과

- 인접지역 간 조업 갈등 해소로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산란기 어미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08 관행적인 준용(準用)은 이제 그만,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



추진부서 사하구 교통행정과 (051-220-4513)

개선배경

공단(工團) 내 근로자가 사용하는 노상주차장과 소규모 상가 앞 노상주차장을 관행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준용하여 운영해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공단 내, 소규모 상가 앞 노상주차장을 주거지전용주차장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

개선 후

- '근무지전용주차장', '소규모상가전용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추진과정

- 자치법규 상 주거지전용주차장 규정과 실제 운영 상황이 맞지 않아 개정 필요
 - 노상주차장 현장 실태 파악, 동주민센터, 관련부서 등 실무협의 추진 등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 개정

개선효과

- 근무지전용주차장과 소규모상가전용주차장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상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



09 발길 줄어든 지하도상가,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위기 극복



추진부서 부산시설공단 상가관리처(051-860-7641)

개선배경

- 부산의 유통 및 관광 중심지에 지하도상가*가 위치하고 있으나 경쟁 심화 및 유통인구 감소 등에 따른 상권 경쟁력 약화 지속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에 대응하고 비대면 소비문화의 일상화 추세에 맞춰 온라인 판로 모색

* 서면, 부산, 남포, 광복, 부산역 등 7개소

개선내용

개선 전

- 방문고객을 통한 상가 운영

개선 후

- 방문고객을 통한 상가 운영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온라인 쇼핑몰 입점부터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 등

추진과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부진을 겪는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혁신적 판로모색
-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인 교육부터 쇼핑몰 입점 및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사업 의견 수렴을 통한 시범상가 선정, 온라인 쇼핑몰(단디쇼핑몰) 구축, 상품등록 무료 촬영공간 오픈스튜디오 운영, 상인 교육(1,400개 상가), 홍보 등
- 쇼핑몰 검색광고 및 취향분류 서비스 등 홍보 마케팅 강화



개선효과

-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으로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



10 해외에 의존하던 부산영도대교 도로포장, 국내 특허기술로 해결



추진부서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 (051-780-0052)

개선배경

- 동양 최초, 국내 유일의 대규모 도개교인 부산영도대교의 통행량 증가 및 노후화로 인한 도로 포장부 손상 지속 발생
- 영도대교 도로 포장재 보수 시 해외 특허제품 의존으로 신속한 보수가 어려워 안전 및 관광 상품성 저해 우려 상존

개선내용

개선 전

- 부산영도대교 도로 포장재(초박층 포장재) 해외 특허제품 의존

개선 후

-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로 도로 포장재(초박층 포장재) 국산화 성공**
- 원활한 자재 수급으로 신속한 보수 가능

추진과정

- 전문 지역기업(화학 및 도장공사 분야)을 통한 국산 초박층 포장재 개발 추진
- 대체재 공동개발 대상기업 선정 추진, 참여기업 전무하여 응급보수 참여기업 대상 공동개발 이점 강조·설득, 지역기업과 공동개발협정 체결(2019. 6.)
- 개발제품에 대한 각종 성능 검사 및 현장시공을 통한 품질 검증
- (실내시험) 마모율, 부착강도 등 외부기관 내구성능 평가, (현장실증) 영도대교 일부구간 시공 후 1년간 점검
- 특허등록(2021. 3.)*으로 자재 수급 해결
*교면포장용 초박층 친환경 접착 코팅제,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



개선효과

- 원활한 자재 수급을 통한 신속한 보수 공사로 시민안전 확보
- 국내 강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판로개척 기대



11 생곡 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구축으로 에너지 자립화 실현

추진부서 부산시 자원순환과(051-888-7121),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사업단 생곡사업소(051-760-3264)

- 개선배경**
-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는 발열량이 높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 가능하여 활용 방안 모색
 - 잉여가스 재활용 확대를 통해 환경개선 및 에너지 자립화 제고

- 개선내용**
- | | | |
|-----------------|---|---|
| 개선 전 | » | 개선 후 |
| · 소화가스 활용 방안 미흡 | | · 소화가스 활용 방안 적극 발굴
· 에너지 자립화 및 잉여전력 판매로 수익 창출 |

- 추진과정**
-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 대수선공사 완료로 소화가스 증가하여 에너지 자립 검토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청·선정, 소화가스 발전설비 운영, 자체 전력 사용 후 잉여전력 사용 검토
 - 전력거래소에 잉여전력 매전사업 추진
 - 발전전력 사용 및 매전을 위한 유관기관* 검사 추진, 전력거래소 e-Power Market 자가용 발전기 계통 확정·연결 (2021. 2.)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 행정안전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선정

- 개선효과**
- 생산전기의 자체전력 사용으로 전력비 절감 및 잉여전력 판매로 재정수익 창출



12 집단급식소 영업승계시 신고 절차 완화

추진부서 서구 기획감사실 (051-240-4031)

- 개선배경**
- 기업체,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양도·양수를 통해 지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운영 신고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개선내용**
- | | | |
|--|---|---|
| 개선 전 | » | 개선 후 |
| 《집단급식소 양도·양수》
· 지위승계 법적근거 미비로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신고 | | 《집단급식소 양도·양수》
· 지위승계 법적근거 마련 |

- 추진과정**
- (발굴)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2020년 2분기 중점과제, 행정안전부)
 - (검토) 규제개선 과제 검토(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개정·시행(2020.12.)

- 개선효과**
- 집단급식소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 승계 절차 간소화로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1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벽보게시판 운영방법 개선

추진부서 동래구 도시재생과 (051-550-4621)

- 개선배경**
- 동래구 벽보게시판을 사용하려면 벽보 게시를 희망하는 전월 1일 7시 30분부터 구청을 방문하여 선착순 접수가능함
 - 그러나 접수 전 대기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접수 방법 개선 필요
 - 이용자는 게재할 벽보를 사전에 제작하여 접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탈락할 경우 벽보 제작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고 접수현황이나 신청결과 등을 안내할 공간 부재로 전화 문의가 빈번함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p>《벽보게시판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매월 1일 선착순 · (벽보제출) 방문접수와 동시에 제출 	<p>《벽보게시판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온라인(카카오톡) 접수 매월 16~17일 · (벽보제출) 배정 후 제출(방문, 택배, 킷)

- 추진과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벽보게시판 신청 방법 개선 추진
 -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 강구, 카카오톡 채널 개설
 - 벽보게시판 운영방법 변경 안내문 배부, 구 홈페이지 홍보
 - 온라인 신청접수 개시(2021. 5.)

- 개선효과**
- 온라인 접수로 대기시간 단축되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벽보게시판 관련 정보를 온라인 채널로 제공해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14 소상공인 살리는 민락수변공원 야외 거리두기 프로젝트

추진부서 수영구 문화관광과 (051-610-3714)

- 개선배경**
- 민락수변공원은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여름 피서철이면 부산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인파가 몰려 코로나19 확산 우려되어 대책 마련 시급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락수변공원의 출입금지가 아닌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도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락수변공원 방문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거리두기 존 설치 - 체계적 안심 방역환경 조성 - 관광객 친화 거리두기 분위기 조성

- 추진과정**
- 광안리 및 민락수변공원 코로나19 대응반 구성, 방역대책 수립(2020. 6.)
 - 관광객 친화 거리두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원에 펄스 안내 음성으로 방역 수칙 준수 및 무질서 행위 금지 안내 방송 송출(10:00~21:30, 매 30분 간격)
 - 민락수변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 동시 수용인원(2,240명) 제한, 출입구 인력배치로 방문자 기록 관리(전자출입명부, 수기출입대장)
 -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 「민락수변공원 돛자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 Waterfront Door」 진행(2020.12.~2021. 4.)
 - 청테이프 거리두기 ZONE 설치 후 수변공원 경관과 어울리는 공공예술 작품 "돛자리"로 재창조

- 개선효과**
- 민·관협업 기반 창의적 아이디어와 체계적인 안심 방역 구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캐릭터 상품을 활용한 관광객 친화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 방역 수칙 준수 및 관광 무질서 개선



PART 2

시민 불편 해소



- 15. 임신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부여
- 16.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
- 17.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봉인 재발급 허용
- 18. 방치된 행정재산(토지)의 상호교환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및 보행로 개선
- 19. 해운대해수욕장 및 동백섬 일원 전동킥보드 서비스 RED ZONE 지정
- 20.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해양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합법적 근거 마련
- 21. 담당자 연결 전화바로걸기 서비스 실시
- 22.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푸드마켓 확대 운영, '진구네 공간'
- 23. 방치된 미사용 경로당, 지역주민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한 '감동드림 빨래방'
- 24. 수원지 보호 VS 보행권 보장의 중재로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
- 25.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 26.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27. 365일 연중무휴 빈틈없는 초등돌봄교실 모델 구축
- 28.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15 임신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부여

추진부서 서구 기획감사실 (051-240-4031)

개선배경

-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우선 제공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한부모·맞벌이·다자녀가정 등의 자녀는 입소 우선 대상에 해당되어 가산점 획득으로 어린이집 입소에 유리함
- 그러나, 임신부는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크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자녀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어린이집 우선 제공 대상》

1.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 7. (생략)

개선 후

《어린이집 우선 제공 대상》

1.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생략)
-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신설)**
4. ~ 7. (생략)

추진과정

-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발굴(부산시, 행정안전부)
-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중앙부처(보건복지부) 과제 검토
- 어린이집 우선 제공 대상에 임신부 자녀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0. 9.)
- 행정안전부 2020년 민생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 수상



개선효과

- 예비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혜택 부여로 저출산 대책에 기여

16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

추진부서 수영구 기획감사실(051-610-4034)

개선배경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시험과목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영어시험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되거나 인정되는 영어시험 종류는 토익(TOEIC), 토플(TOFLE), 텡스(TEPS)로 한정되어 수험생의 선택 폭이 좁아 개선 필요
- ※ 국가고시(5급, 7급)에서 인정되는 영어시험 : TOEIC, TOFLE, TEPS, G-TELP, FLEX

개선내용

개선 전

-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범위》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개선 후

-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범위》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추가)**

추진과정

- 법령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라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규제 개선 건의(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22. 1. 1.)

개선효과

- 영어시험 선택폭 확대로 수험생 부담 경감 및 국가공인자격증 간 형평성 도모

17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봉인 재발급 허용

추진부서 연제구 기획감사실 (051-665-4031)

개선배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항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한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에서 봉인이 떨어진 경우 번호판을 봉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재봉인》
-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봉인한 지방자치단체



개선 후

-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재봉인》
-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발급 가능

추진과정

-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발굴(부산시→행정안전부) -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과제 검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 8.)
- 행정안전부 2020년 민생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 수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이륜자동차번호판 재발급 및 재봉인 할 수 있어 시민불편 해소
-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의 운행 감소 효과 기대



18 방치된 행정재산(토지)의 상호교환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및 보행로 개선



추진부서 북구 건설과 (051-309-4734)

- 개선배경**
- 주민들과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비포장 보행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개선이 필요하나 소유자(교육청) 외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추진 난항
 - 기관간(북구청↔교육청)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 및 보상'만 가능해 난관 봉착

개선내용

개선 전	»	개선 후
· 공유재산 소유자와 영구시설물 설치금지로 보행로 환경 개선 추진 난항		· 행정재산 교환으로 보행로 환경개선 가능

- 추진과정**
- (무상사용 불가) 학교부지 내 비포장 보행로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2020. 1.~)
 - 과도한 토지수용비(9억) 발생으로 사업추진 난항
 - (토지교환) 학교부지의 무상사용 불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교환은 불가하여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토지교환 추진
 - (해결방안) 공유재산법 적용으로 소규모 재산을 한 곳에 모아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 북부교육지원청 방문 협의, 토지 전수조사(기존 교환부지 및 인접부지 전수조사), 교육청 재산관련 부서와 적극적 소통 및 협의 추진
 - (교환합의) 교육청과 토지교환 합의로 보행로 환경 개선 가능(2021. 3.)



- 보행환경 개선으로 주민 안전 확보 및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증진
- 기관 상호간의 토지교환으로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 실현



19 해운대해수욕장 및 동백섬 일원 전동킵보드 RED ZONE 지정



추진부서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051-749-7615)

- 개선배경**
- 공유전동킵보드이동서비스 제공업체(라임코리아)가 부산에 진출(2019.12.)함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 및 동백섬 일원에 해당 회사 전동킵보드 이용자 급증으로 보행객들의 안전 위협
 - 관련 법*에 따른 차마진입이 금지사항이나 이용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여 보행자 안전 위협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선내용

개선 전	»	개선 후
《공유전동킵보드 운행제한구역》 · 공유전동킵보드 어플 내 운행 제한구역 표시 없음		《공유전동킵보드 운행제한구역》 · 공유전동킵보드 어플 내 운행 제한구역 표시

- 추진과정**
- 공유전동킵보드 업체(라임코리아)와 전동킵보드 운행 제한 관련 협의
 - 전동킵보드 운행 제한구역 지정(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동백섬 송림공원 일대), 이용자 사용 어플(Lime)에 운행 제한구역 표시(2021. 3.)
 - 해운대 해수욕장 및 동백섬 주요 입구에 홍보 안내문 게시



- 해운대해수욕장 및 동백섬 산책로 내 보행자 안전 확보
- 전동킵보드 운행 제한구역 지정 후 전동킵보드 이용자 약 70% 감소



20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해양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추진부서 영도구 해양수산과 (051-419-4454)

- 개선배경**
- 부산항대교 하부 휴식공간의 무분별한 점유·사용으로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로 부산항 환경 훼손
 -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을 시민 휴식공간 및 캠핑장으로 조성 추진코자 하였으나 영조물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친수시설 설치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개선 후
·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은 영구시설물 설치 되지 않는 매립지		·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을 ‘도로구역’으로 지정 · 공원시설 등 설치 가능

- 추진과정**
- 찾아가는 해양수산행정협의회 개최(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5~2016)
 -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매립기본계획 반영 건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수차례 협의 추진(2017~2019)
 -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구역’ 지정(2019.12.)
 -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협의(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거쳐 캠핑장 조성 추진
 - 캠핑장 준공 예정(2022. 상반기)

·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개선효과

21 담당자 연결 전화바로걸기 서비스 실시

추진부서 부산진구 세무2과 (051-605-4213)

- 개선배경**
- 부산진구는 취득세 신고 및 셀프등기를 안내하는 QR코드와 지방세, 세외수입, 생활정보, 관광 정보를 한번에 안내하는 QR코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QR코드 내 정보검색 후 문의사항 있을 경우 담당자 전화번호를 메모하였다가 전화를 해야 하므로 이용에 불편 발생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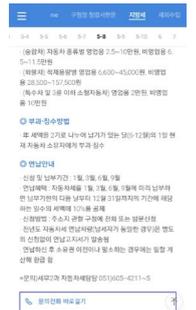
개선 전	»	개선 후
《행정서비스 QR코드 안내》 · 정보검색 가능 ·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바로걸기 불가		《행정서비스 QR코드 안내》 · 정보검색 가능 ·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바로걸기 가능

- 추진과정**
- 취득세신고 및 셀프등기를 안내하는 QR코드 내에서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화연결 회선 구축(110개 회선)
 - 기존 정보 수정 및 신설 시책 추가(지방세, 세외수입, 생활정보, 관광정보⇒198개 항목)
 - 전화바로걸기 시스템 운영·시행(2020. 3.)
 - 행정안전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선정

· QR코드 내에서 정보검색 후 담당자에게 전화바로걸기가 가능하여 이용 편의성 증진,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개선효과



22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푸드마켓 확대 운영, '진구네 곳간'

추진부서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051-605-4312)

- 개선배경**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기존 푸드마켓*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저소득 취약계층에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무상 제공하여 생계비 부담 완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p>《푸드마켓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긴급지원대상, 기초수급탈락·중지자, 차상위계층 등 이용자 범위 제한 · (내용) 원하는 기부식품 제공 	<p>《진구네 곳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존대상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구민으로 확대 · (운영) 기존 푸드마켓 (확대) · (내용) 원하는 기부식품 제공

- 추진과정**
- 기존 푸드마켓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지원 방안 추진
 - 관내 유통업체, 재래시장 상인회, 공무원 등 기부를 통한 자원 마련
 - 푸드마켓을 확대한 '진구네 곳간' 개소(2021. 4.)
 - 지역 내 3곳 추가 개소(3곳)외 추가 설치 및 홍보 추진

- 개선효과**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홍보를 통한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증가



23 방치된 미사용 경로당, 지역주민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한 '감동드림 빨래방'

추진부서 남구 감만2동 행정복지센터 (051-607-3542)

- 개선배경**
- 감만 2동은 인근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임차료가 저렴하고 최근 2년 동안 인근 재개발 지역인 우암동 등에서 취약계층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27%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구성된 초고령 지역임
 - 취약계층 대부분이 주거환경이 협소하고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 이불 같은 큰 빨래 세탁과 건조가 어려운 실정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불 등 큰 빨래 세탁과 건조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경로당을 활용한 '감동드림 빨래방' 개소로 주거 환경 개선 · (운영) 주 5회, 09:00~17:00

- 추진과정**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가, 유휴부지 등 공유공간 부지확보 조사
 - 장소사용과 관련한 주민동의, 기관 간 협의추진,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물품 확보
 - 감만 2동 '감동드림 빨래방' 개소·운영(2020.10.)
 - 전담인력 확보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건물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 추진

개선효과

-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편의 공간 및 사랑방 공간 제공



24 수원지 보호 VS 보행권 보장의 중재로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부서 금정구 공원녹지과 (051-519-4544)

개선배경

- 회동수원지 땅묘산~오륜본동~부영산을 연결하는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도심 속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 회동수원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관련기관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 증가를 우려하여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제한 요구

개선내용

개선 전

- 회동수원지 수질보호를 위해 편의시설 등 설치 제한으로 생태탐방로 조성 불가

개선 후

- 지속적 설득·협의를 거쳐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 가능**

추진과정

- 회동수원지 둘레 치유숲길 조성을 위한 생태탐방로 국토부 GB환경문화사업 선정
-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환경·수질개선 협의(상수도사업본부), 공사 발주
 -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제한 요구,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증가 우려되어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 중지 요청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에 사업 필요성 강조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 정비, 휴게시설 최소화, 환경정비 전담인력 확보 등 지속 협의·설득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으로 공사 재개
-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2020. 6.)

개선효과

- 단절된 수변길 연결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회동수원지 갈맷길과 생태환경을 연계, 수변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침체지역의 이용자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5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추진부서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519-4353)

개선배경

- 복지대상자 통신비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대상자 지속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대행서비스 실시
- 미신청자 발생

개선 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미신청자 전수조사**
- **미신청자 일괄 서비스 신청 대행**

추진과정

- 복지대상자 통신비 요금감면 100% 도시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
 - 동별 요금감면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미신청자 파악 등),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홍보 추진(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 SNS홍보, 언론보도 등)
 - 개별가구 안내문 발송, 신청 서비스 일괄 대행, 미신청 사유 분석
- 통신비 등 요금감면 미신청 건수 대비 99.5% 실적 달성
 - 사유 분석을 통해 요금체납자 등에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

개선효과

- 통신비 요금감면 대상임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누락 방지
- 전수조사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긴급복지 지원 연계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26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추진부서 수영구 문화관광과 (051-610-4068) / 사하구 문화관광과(051-220-4094),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051-220-5805)

개선배경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시민들의 나들이 및 관광객 수요 감소로 관광, 문화, 공연 등 관련업계 종사자 및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됨
-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변화와 방역수칙 준수로 지쳐있는 구민들에게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치유 필요
- *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함

개선내용

개선 전

《문화예술 공연》

- 방역수칙 준수로 관광, 공연, 전시회 등 취소



개선 후

《문화예술 공연》

- **온라인을 통한 전시회, 문화 예술 공연**

추진과정

수영구

- 힘내라 수영! 방구석 라이브 운영을 통한 구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 추진
 - 음악, 토크,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과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 행정안전부 '2020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선정

사하구

- 각종 전시회·공연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슬기로운 랜선 문화생활' 추진
 - 전시회, 오페라 공연, 안내 주요 관광지 체험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등 촬영
- <홍티예술촌 온라인 전시회>, <을숙도문화회관 온라인 오페라 공연>, <구석구석 랜선투어> 콘텐츠 영상 송출
- 행정안전부 '2020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벤치마킹 분야)' 선정

개선효과

-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장 대관, 공연 기회 제공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제공
- 시민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문화적 욕구 해소

27 365일 연중무휴 빈틈없는 초등돌봄교실 모델 구축

추진부서 기장군 인재양성과 (051-709-5485)

개선배경

-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
-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공급자 중심의 돌봄에서 수요자 중심의 틈새 없는 돌봄으로 전환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초등돌봄교실 운영》

- 평일(오전, 저녁), 주말, 공휴일에 돌봄 공백 발생



개선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

- **공백없는 365일 연중무휴 돌봄교실 운영**

추진과정

- 2021년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추진 사업에 '협력모델 교실' 신청(기장군→교육청)
 - 기장군-부산시 교육청 간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협약 체결(2020.11.)
 - 수요자 중심의 틈새 없는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관간 간담회* 개최 등 제반 사항 준비 추진
 - *기장군-교육청-해빛초-기장군도시관리공단
- 365일 연중무휴 초등돌봄교실 운영(돌봄교실 3실, 60명)(2021. 3.)



-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오후돌봄(13:00~17:00) 외에도 본교 학생의 수요가 없는 시간대(저녁, 휴일 등)에 인근 타 학교 학생도 수용하는 등 거점돌봄교실 역할 수행
- 공적 돌봄 제공 확대로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



28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추진부서 기장군 인재양성과 (051-709-4645)

개선배경 기장군에서는 보육·교육기관에 식자재비와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정양육 영유아의 경우 급간식비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	개선 후
《보육사업 지원》 ·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근거 부재		《보육사업 지원》 ·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근거 마련

- 추진과정**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가정양육 급간식비) 신설에 대한 협의 추진
 - 협의 결과에 따라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보육조례」 개정(2021. 4.)
 - NH농협은행 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가정양육급간식 지원사업 안내문 배포 및 홍보,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선불카드 배부

개선효과

- 가정양육 영유아에게도 급간식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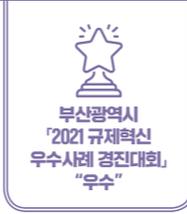
PART 3

기타



- 29. 「KT 지중화 사업비」 분담 협약 체결
- 30. 계곡수 유입을 통한 지방하천 수질 개선
- 31. 테이크아웃컵 회수 체계 구축
- 32. 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최초 시행

29 「KT 지중화 사업비」 분담 협약 체결



추진부서 연제구 건설과 (051-665-4694)

개선배경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 따르면 '지중화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나 KT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분담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비 부담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인자(지자체) 부담을 인정하고 있음
 - ※ 「전기사업통신법」 제63조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
- 연제구에서 「반송로(연산교차로~안락교차로 간선도로) 지중화사업」 및 「오방맛길 지중화사업」 추진 중에 KT에서 지중화 사업비 100%를 구청에 요구하였고, 「반송로 지중화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비 전액을 KT에 납부 완료하여 사업비 분담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개선내용

개선 전

《지중화사업 공사비》

- 원인자 100% 부담



개선 후

《지중화사업 공사비》

- **협약을 통한 사업비 분담(50% 감면)**

추진과정

- KT와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
 - 타 지자체·유관기관 사례 전수조사, 법률적 미비점 및 공익사업의 필요성 제시 등 다양한 검토와 노력으로 6개월간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실무협상 추진
- 연제구와 KT 협약 체결(사업비 분담 50%)
 - 오방맛길 KT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반송로 KT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개선효과

- 지중화사업비 분담 협약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약 4억원)
- 무분별한 공중선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30 계곡수 유입을 통한 지방하천 수질 개선

추진부서 사상구 건설과 (051-310-4685)

개선배경

- 삼락천은 공업·주거 지역을 관통하는 도심 지방하천으로서 평소 낙동강에서 물을 강제 유입하여 유지용수로 활용
- 낙동강 원수의 수질 악화, 우천 시 인근 공업지역 등에서 흘러 들어오는 비점 오염물질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물고기 폐사 현상이 반복적 발생
- 삼락천과 인접한 운수천은 소하천 1급수 수준으로 하천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를 이용해 삼락천의 수질 개선 모색

개선내용

개선 전

- 공업지역 특성상 환경오염원 빈번히 유입
- 고질적 악취,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 관련 문제 지속 발생



개선 후

- **백양산 계곡 1급수를 삼락천으로 유입**
- 친환경 하천으로 탈바꿈

추진과정

- 삼락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공사 추진(2020. 6.)
 - 공사 추진관련 제반사항 이행(예산확보, 보고회, 공사구간 지속 현장확인 등), 운수천 수질검사 및 복개구조물로 흐르는 유량측정, 내부 현장 탐사 등
 - 공사구간 각종 지장물로 관매설 애로사항 해결하고자 관련 부서(통신사, 도시가스 등) 방문 협의, 관매설 경로 변경 등 어려움 극복
 - 공사구간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홍보, 주민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 설명
- 삼락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공사 준공(2021. 3.)
- 행정안전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선정



- 하천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으로 공업지역 근로자 및 주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 제공
- 낙동강 수문개방 대비 원수 선제적 확보로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 해결하여 어족 자원 보호



31 테이크아웃 컵 회수 체계 구축

추진부서 해운대구 자원순환과 (051-749-4452), 북구 자원순환과(051-309-4439)

개선배경 테이크아웃 커피와 음료를 즐기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용한 일회용 컵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률이 저조하며 도시미관 저해

개선내용

개선 전	>>	개선 후
· 테이크아웃 컵이 일반쓰레기로 유입 - 재활용률 저하		· 테이크아웃 컵 회수 체계 구축 - 무단투기 근절 및 재활용률 제고

추진과정

해운대구

- 반납된 일회용컵을 판매점에서 세척 후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
 - 테이크아웃 판매점 전수조사 추진(구남로 및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카페)
 - 시범 참여업소 선정, 안내판 제작·부착(일회용컵 받아주기 참여가게로 지정)
 - 사업 시행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행정안전부 '2020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선정

북구

- 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 보상제 추진결과(2개소) : 2020년
- 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 보상제 확대 추진(12개소) : 2021년
 - 한국환경공단, 덕천 젊음의 거리 일대 카페와 협업 추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등으로 일회용컵 수거 체계 구축, 재활용률 제고



- 개선효과**
-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테이크아웃컵을 가까운 참여업소에 반납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및 가로환경 개선
 - 반납된 테이크아웃컵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순환 촉진



32 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최초 시행

추진부서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051-709-4663)

개선배경

-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각종 민원 분쟁 발생
-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 호소

*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개선내용

개선 전	>>	개선 후
· 현황도로 보상에 관하여 별도 법적근거 불명확		· 현황도로 협의 매수 시행 - 민원인의 불편과 분쟁 적극 해소

추진과정

-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현황도로 사유지 매수대상 사업 홍보, 희망자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협의대상 선정, 지적분할 측량, 현장감정평가 실시 후 협의매수 시행
- 매수 완료된 현황도로에 대해 우선적 도로정비 시행



- 개선효과**
- 각종 민원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에 기여

PART 4

적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33.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및 가덕신공항 건설 토대 마련
34.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무상임대 공간 확보 및 외국계 금융기업 6개사 유치
35. 초고령화 도시! 부산에 전국 최초로 등장한 출산장려 택시!
36. 전국 최초, 임시격리(생활)시설 민간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추진
37. 공원일몰제 위기 「생태의 보고 이기대」 보전녹지지정으로 난개발 방지
38.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39.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유도선 사업 영업구역 확대
40. 온천천 물고기 폐사 경보제 시행 제안
41.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의 친환경 수목원 조성 추진
42. 내부순환(만덕~센텀) 대심도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협의체로 소통 해소
43. 규제혁신을 통한 국내대표 이커머스 쿠팡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유치 성공
44.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버팀목 마련
45. 더파크 동물원 민사소송(매매대금 500억청구) 승소 및 동물원 정상화 추진
46. 생명의 문을 지켜라! 전국 최초 민간협업 공동주택 피난안전환경 조성
47. 건설사업장 임시검사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 추진, 코로나19 확산 차단
48. 전국 최초, 지역건설산업 활로 개척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 일감 확보 및 하도급 수주 확대
49.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전국 배포
50.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전국 표준가이드 마련, 생명골든타임 확보!

33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및 가덕신공항 건설 토대 마련



추진배경

-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2002년 중국 민항기 뚫대산 충돌사고 이후 김해공항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논의
- 2011년 입지평가에서는 백지화로 결정되고, 2016년에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어 좌초 위기에 직면
- 2018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으나 안전, 시설, 소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치명적 문제점 확인
- 2019년 부울경과 국토부는 총리실로 이관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본격 검증

해결노력

- ① ICAO, FAA 등 국제기준과 국내법 등 방대한 자료 수집과 끈질긴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검증 역량을 축적하여 과학적 기술적 분석 수행
- ② 국토부 논리에 대응하여 철저한 분석과 반박불가 논리 개발로 검증보고서(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의 완성도 제고
- ③ TK주장과 중앙언론에 대한 반박논리 개발 및 팩트체크, 보도자료 배포, 오해와 진실 리플렛 제작, 언론 브리핑 등으로 시민 홍보
- ④ 국회 방문 설명, 육·해상 현장 설명 등을 통해 가덕 신공항의 우수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공감대 지속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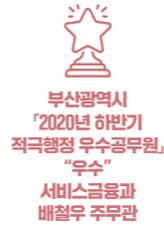


주요성과

-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 도출
- 가덕신공항 최적대안 검토 및 Fast-Track 추진방안 마련
-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추진, 국비확보 및 후속용역 착수



34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무상임대 공간 확보 및 외국계 금융기업 6개사 유치



추진배경

- 2009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문헌금융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 제고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 유치가 시급한 실정
- 그러나, 외국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지원책이 부족하여 외국금융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10여 년간 금융중심지 IR등을 통해 외국금융기업 유치하려 했으나 유치실적 全無

해결노력

- ◎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소유주 및 매수자에게 외국계 금융기업을 유치해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라는 공익 기여 논리로 할인 매각(소유주) 및 일부 공간 무상임대(매수자) 협상을 10여 차례 이상 중재
- ◎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유명 법무법인 협조, 현지 네트워크 활용과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금융기업 유치 노력

주요성과

-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전체 공간(3,057.24㎡)의 약 1/3인 1,016.09㎡(약 300평)를 25년 +@동안, 부산시 무상임차 권리 확보(약 45억원 이상 예산 절감)
- 자산운용·디지털 금융기업 등 4개국 6개사 외국기업 유치로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와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통한 부산 금융산업 생태계 확대와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 부산 기반 조성



35 초고령화 도시! 부산에 전국 최초로 등장한 출산장려 택시!



추진배경

- 부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인 0.6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 발생,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출산율 기록
- 대중교통 및 직접 자가용 운행이 어려운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시책이 부족한 실정

해결노력

-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 임산부 포함을 위한 조례 개정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교통약자콜택시) 개정
- ◎ 임산부 콜택시 운영을 위한 콜센터 구축 예산 미확보에 따른 어려움 극복
 - 저예산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마마콜 전용앱 개발
 - 앱을 이용한 배차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시민 홍보
- ◎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단체 선정의 난항 해결
 - 선정된 운영단체(자비콜), 운영 콜당 봉사료 지급 요구로 협상 난항 발생
 - 임산부 콜택시 운영에 따른 매출 증대 등 이점을 들어 운영단체 공개모집 전환
 - ⇒ 운영단체로 등대콜 선정(콜 봉사수수료 미지급)

주요성과

- 임산부 전용 콜택시(마마콜) 운영으로 임산부 교통편의 증진
 - 콜택시 등록자 16,017명 달성, 총 107,285회 운영('21. 9월말 기준)
- 2020년 부산 시민행복 10대 뉴스 선정



36 전국 최초, 임시격리(생활)시설 민관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추진



추진배경

-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임시생활시설' 운영(해외입국자·접촉자 격리)
 - 입소자 증가로 시설 추가지정 시, 지원인력 추가배치 등 운영 애로
 - 잦은 근무자 교체(시설당, 1일 2교대 16명)로 운영업무 혼선 및 효율성 저하
- 각종 지원근무 증가, 방역대응 등 업무량 과다에 따른 직원 피로도 완화 필요

해결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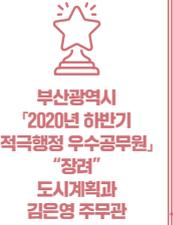
- ◎ 전국 최초, 임시격리시설 '민간(호텔) 주도형' 운영으로 시 지원인력 감축
 - 물품·식사전달, 수송·비용징수, 객실안내, 방역·청소 등은 '민간(호텔)' 수행
 - 입·퇴소 결정, 건강관리, 위급상황 대응 등 '시'는 최소한의 공공분야 사무수행
- ◎ 전국 최초, 현장상황실 공공인력을 '공로연수자'로 대체 배치(2개 시설 16명)
- ◎ 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로연수자'의 수당지급 근거 마련
 - (2020.10월) 시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 ▶ 시설근무 공로연수자 수당지급
 - (2020.11월) 위원회 결정 ▶ 코로나19 신속대응 위해 수당지급 한시적 허용

주요성과

- (2020. 8.~) 임시격리시설 현장상황실에 전담인력(공로연수자) 배치로 업무 연속성·안정성 확보 및 직원 업무부담 경감 ⇨ 일반직원 배치 '제로(0)'화
 - 격리시설 내 운영인력 등 감염사례 없음, 무단 이탈자 미발생
- (2020. 6.~ 7., 중대본) 임시생활시설 운영 우수사례(벤치마킹)로 '부산시' 소개



37 공원일몰제 위기 '생태의 보고 이기대,' 보전녹지지정으로 난개발 방지



추진배경

-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일원이 최근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생태보존 가치가 높아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나, 2020. 7. 1.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난개발 위기
 - ⇨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수 불가

해결노력

- ◎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침해 민원과 유사사례에 대한 소송 제기
 - 재산권 침해 민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민원 등에 대해 설득 노력과 보도자료 배부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 공원시설의 실효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극심한 민원이 예상되어 부서 간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이견 발생
 - 실국간 수차례 실무회의, 시장보고 및 실국 협의하 신속한 방침 결정, 관할 구청(남구) 정책방향 일원화 추진 협조

주요성과

- 보전녹지지정으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이기대 일원의 보전
- 예산부족으로 전면매수가 불가하여 공원실효에 따른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행정불신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 과감한 결정으로 행정신뢰 회복
 - ⇨ 이기대(장자산) 보전녹지 지정 고시 후 다수 시민들 감사 인사 전함



38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추진배경

- 양산 주민 및 부산 금정마을 등 주민 반대위원회 결성으로 전략적 대응 필요
 - (환경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2020. 3.~2021. 7.)
- 환경부 타당성 조사 용역시 지정 면적 낙동강 하구 등 확대로 새로운 갈등 상황 전개
- 금정산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지에 대한 보전방안 타부서에서 우리부서 전환

해결노력

- ◎ 반대 주민 위주로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 관계 형성
 -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공식·비공식적 29회 만남 등 추진
-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우리시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점 도출 노력
- ◎ 금정산 도시계획시설 실효지에 대한 보전방안이 주민불편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
- ◎ 이해관계자의 입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 분석 등 데이터 구축

주요성과

- 국립공원 지정 반대 주민, 대토지소유자, 낙동강하구 어촌계 입장 변화
 - 양산 주민 및 낙동강 하구 어촌계 소규모 설명회 개최 합의
- 지속적인 소규모 면담 등을 통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1차 경계안 마련(101km²)
- 금정산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지 적극적 검토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협의 추진



39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유도선 사업 영업구역 확대



추진배경

소형선박으로 승하선이 가능한 해상택시 도입을 위해서는 도선사업(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바다목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 제한으로 인해 짧은 노선 및 적합지 부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에 애로 발생

해결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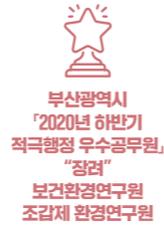
- ◎ 2019. 3.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제출(행정안전부)
- ◎ 2019. 6. 시 규제혁신 토론회 참가→건의 수용
- ◎ 2019.12.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2해리 이내 규정 삭제)
- ◎ 2020. 4~12. (신)부산해상관광교통수단도입 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 ◎ 2021. 4. 해상버스(택시)도입을 위한 실무협업추진단 구성(부산, 해수청, 해경, BPA)

주요성과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선사업 영업구역 확대
 - (현 행)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 (개 정)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의 형태를 갖춘 곳
 - ⇒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부분 삭제
- (신)부산해상관광교통수단(해상택시, 해상버스, 수륙양용투어버스)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시범노선 선정(예정)
 - 해상택시(자갈치~영도~송도, 용호동~수영강~해운대)



40 온천천 물고기 폐사 경보제 시행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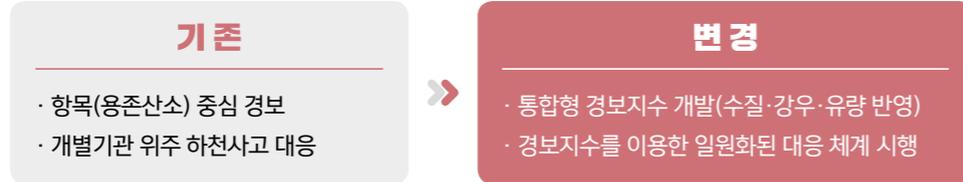
추진배경

- 온천천 강우 직후 물고기 폐사 사고(100마리 이상) 빈번히 발생('15.~'20.)
- 물고기 폐사 사고 전 경보발령으로 예방적 행정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 현장중심 오염 대비활동에 필요한 경보지수 도출·전파로 하천 관리
 - 물고기 폐사 사고로 인한 민원야기 및 극도의 불쾌감 유발 해결

해결노력

- ◎ 물고기 폐사 경보 기준(안) 도출 ▶ 전국 최초 경보지수 개발

구분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기준	경보지수(AI) 20 초과	경보지수(AI) 25 초과
해제	경보지수(AI) 15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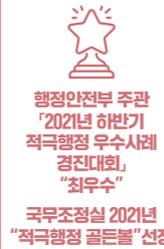
- ◎ 과거 물고기 폐사 사례 분석을 통한 지수 자체개발 완료('20. 5. 경보지수 적용 검증)

주요성과

- 수질개선을 위한 수영강수계 수질협의회 지원
 - 온천천 수질현황과 물고기 폐사 경보제(안) 도입 제안 발표
- 정책 건의 반영 및 시범 운영 시행
 - 「온천천 물고기 폐사 경보제(시범운영) 추진계획」 시행(시 맑은물정책과-511(2021. 1. 14.))



41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의 친환경 수목원 조성 추진



추진배경

- 1987년부터 6년간 장기간 대량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자연환경 파괴(약취, 침출수, 소음 등)로 지역주민 및 경제 극심한 고통 유발
- 이의 빠른 치유를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목원 조성사업의 정상화 및 임시개방을 통해 입장료, 주차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감성충전소 제공

해결노력

- ◎ (전문관 신청) 장기표류 사업의 문제점, 추진과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수목원 전문관 신청, 해당업무에 집중, 주요 난관 극복(2년 8월)
- ◎ (숙원사업 해결) 미추진 환경영향평가 수행, 7년간 진행된 사유지 토지보상 완결, 수목원 주요 시설인 건축물 축조 위한 법적근거 마련
- ◎ (기부사업 협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기부사업 참여로 사업비 확보의 큰 물길 마련, 지속적 추진



- 주차비, 입장료 부담없는 시민들의 감성충전소 해운대수목원 임시개방 추진
 - 20개 주제원 133천평, 주차장 655면
- 장기미집행 과제 해결 : 환경영향평가, 보상완료(464억원), 건축공사 법적근거 마련
- 기부사업 추진(17.5억원) : 미래에셋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장애인총연합회 등



42 내부순환(만덕~센텀) 대심도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협의체로 소통 해소



추진배경

- 전국 최초 전자중 통행이 가능한 대심도터널 조성으로 부산 내부 순환망 형성과 안정적인 동서간 교통체증해소*로 “15분 도시” 조성의 핵심사업
- * 남해고속도로~센텀간 통행시간 41.8분→11.3분(완공 시, 30.5분 단축)
- 도심지를 광범위하게 가로지르는 대심도공사의 소음·진동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속·반복적 민원해소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소통추진

해결노력

- ① (협의체) 내부순환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지역민 민원갈등의 적극적인 소통·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갈등해소 기구인 4자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② (서명식)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서명식을 통한 문서화로 행정 신뢰성 회복
- ③ (주민참여) 4자협의체, 시민감시단, 안전도우미, 건설인부 참여 등을 통한 상시 현장확인 참여 및 최선의 상생방안 모색

주요성과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각종 상생방안 모색*
 - * 발파방법 변경(1분할→16분할), 지역주민 활용한 안전도우미, 인부 활용, 비상탈출구 부지 주민 공간 활용 등
-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한 서명식* 부분에 대한 상호간 문서화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회복
 - * 소음·진동 법적 기준치 준수(계측기 3개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기계 진입금지, 인근 학교 간담회 분기 개최 등



43 규제혁신을 통한 국내대표 이커머스 쿠팡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유치 성공



추진배경

- 온라인 전자상거래, 비대면 소비 증가에 힘입어 물류시장 성장세, 시장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물류산업 선점 및 물류 허브도시 위상 강화
- 물류·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은 쿠팡(株)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추진
 - ⇒ 2018년 쿠팡(株) 유치를 추진했으나, 업종 규제를 풀지 못해 유치 실패

해결노력

- ① 2020. 8월 정부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에 맞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부산시 최초로 업종 특례지구 직권 지정
- ② 쿠팡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제도' 적용 허용, 건축물 층수 상향(5→6층)을 통한 투자·고용 확대, 분할토지 합필 등 까다로운 투자요건이었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도시공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대형 투자유치 성공

주요성과

- 물류허브도시 부산에 업계최고 물류·전자상거래 기업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 부산 신항만 인접지역에 물류센터 건설, 쿠팡 해외진출 거점지로 성장 기대
- 22백억원 투자, 3천명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4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버팀목 마련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부산지역 사업체 271천개 중 85.6%가 상시 근로자 5~10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 부채증가로 폐업 등 고려
- 생계형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증가, 대출한도 초과, 신용문제 등으로 대부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실정

해결노력

- ◎ 전국 최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 특별자금」 지원(2021. 5. 31.시행)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1만명 대상 1,000억원 규모, 특별자금 지원
 - 부산은행 50억원 출연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활용, 필요 자금 확보
 - (지원내용) 기존 보증한도와 무관(無한도)하게 1,000만원 대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無신용), 1년 無이자로 1년이후부터 0.8% 총 5년동안 이자 지원
- ◎ 폐업 소상공인 대출 정상 상환과 재기 지원을 위한 250억원 규모 「브릿지 보증」 실시(2021. 7. 5.시행)



- 민간(BNK부산은행) 협력자금 50억원 전격 유치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특별자금」 조기 소진(2021. 6.30), 정책자금 집행완료
-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국비 매칭 자금(시비) 13.3억원 국비 확보



2021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45 더파크 동물원 민사소송(매매대금 500억청구) 승소 및 동물원 정상화 추진



추진배경

- 2012년 좌초 위기의 민간 동물원 조성사업을 매수부담(최대 500억)이라는 협약을 통하여 2014년 정상적으로 개장
- 협약 기간 내 협약 당사자의 협약 조건 미이행(토지내 공유지분등 私權)에 따른 매수청구 반려 등 갈등에 따른 협약 종료와 매매대금(500억) 청구 민사소송 제기(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적극 소송지원 등에 따른 승소

해결노력

- ◎ 장기표류, 언론 및 의회 등 집중 관심사업에 따른 업무부담을 적극행정 마인드로 극복하면서 협약당사자와 지속협의 및 3자매각 주선, 민관협의체 운영 등 노력
- ◎ 소송 관련은 반드시 승소한다는 각오로 수행 및 소송 승소 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 등 후속대책 강구
- ◎ 빠른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동물원 이용방안 제공 노력



- 소송 진행시 우리 시에 유리한 자료 적극 수집
- 소송 승소함에 따른 패소시 소요되는 청구 매매대금 500억 및 관련 이자 등에 대한 예산 지급 부담 해소
- 승소(1심)로 향후 제기되는 추가 소송에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가능 기반 마련



46 생명의 문을 지켜라! 전국 최초 민간협업 공동주택 재난안전환경 조성



추진배경

- 경기도 군포시 소재 OO아파트 화재발생(2020.12. 1.)으로, 상층부 거주자 옥상 대피 과정에서 연기로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해 한 층 위인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인명피해 발생(사망 2, 부상1)
-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방법 목적으로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 옥상 대피가 어려운 실정

해결노력

-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 및 설치예산 지원 협의
 - 조례 개정을 통한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예산지원 근거 마련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예산 지원 지속 추진 및 입주민 자발적 설치 유도 병행
- ◎ (안내표지등부착) 홍보물품 설치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 및 자발적 참여 지속유도
 - 노후아파트 안내표지, 바닥유도선, 형광테이프, 차단구조물 등 우선 배부



주요성과

- (시설설치) 민간 협업을 통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설치
 - 비상문자동개폐장치(기장군·입주민), 안내표지(소방), 차단구조물(입주민)
- (조례개정)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으로 지원근거 마련
 - 강서구 조례(시행 2021. 7.13.) 상, 지원대상에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추가
- (소방청 수범사례 선정) 전국 소방본부 전파 및 추진
 -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개정 협의 : 소방청↔국토부, 소방본부↔시군구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활용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 시군구→공동주택



47 건설사업장 임시검사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 추진, 코로나19 확산 차단



추진배경

-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부각
- 2021. 2~3월 타 지자체(경기, 충남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밀집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속적 발생

해결노력

- ◎ 2021. 3월 외국인 밀집 건설사업장 방문, 이동형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작업 중인 49개 건설사업장(공공/민간) 1,814명 검사 완료⇒전원음성 확인
- ◎ 2020.12월~2021. 6월 건설사업장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 긴급 점검(2020.12.18.~2021. 1.19.) 공공사업장 295개소 실시
 - 2021. 2월 이후 매주 건설사업장 점검 실시(누적 18회, 6,708개소)
 - 마스크 미착용 작업자, 사업장 내 방역수칙 미부착 등 다수 시정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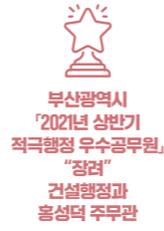


주요성과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건설사업장 대상, 선제적 코로나19 선별검사 등 조기 방역관리체계 확립
- 관내 시행중인 민·관 건설사업장 대상, 정기적인 방역실태 준수사항 점검으로 집단감염 예방
- 건설사업장 내 감염 우려 차단으로 근로자 및 시민 안전 확보



48 전국 최초, 지역건설산업 활로 개척을 통한 지역건설업체 일감 확보 및 하도급 수주 확대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장기화 및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위기의식 팽배
- 민관의 상생·협업을 통해 침체된 민간건설부문 일감 확보 지원 및 지역업체 역량강화와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강화로 하도급 수주 확대

해결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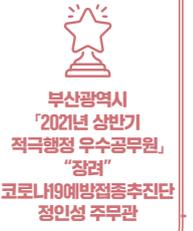
- ① 민관의 상생·협업을 통해 침체된 민간건설부문 일감확보 지원
 - 지역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 개최(2020.11. 6. 대기업17, 지역업체51 참여)
 -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설대기업 현장소장, 구·군 건축과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간담회)
- ② 지역업체 역량강화와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강화 등으로 하도급 수주 확대
 - 「지역중소전문·설비 건설업 Scale Up」 지원(2018.~2021. 4개년 68개 업체)
 -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구성·운영(2021. 4.28.~30. 수도권 대기업 5개사 방문)
 - 지역건설업체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2021. 5.28. 31개 업체 참여)



- Scale Up 지원사업 참여 후 협력업체로 신규 등록된 건설대기업 총 66건
- 건설대기업 협력사 신규등록에 따른 수주 14건, 782.8억원
-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 삼성물산(주)온천4구역327억수주, (주)포스코건설, (주)KCC건설, GS건설(주), (주)대우건설대연4구역340억수주



49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전국 배포



추진배경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재
- 접종 후 이상반응 대기시간을 각 대상자별로 측정해야 하는 소요 발생
- 대상자별 대기시간 상이에 따른 현장 혼선 최소화 및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추진 필요성

해결노력

- ① 현장 중심 대민서비스 향상 위해, 부서 직책 막론 개발 능력 적시 발휘
- ② 부서와 직책과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제공, 시급한 코로나19예방접종체계 구축을 인지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 ③ 현장 중심의 프로세스를 시급히 연구하여 프로그램에 반영
- ④ 배포 후 현장 보급을 위한 확인 및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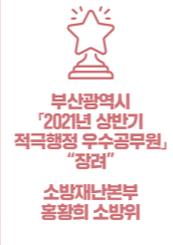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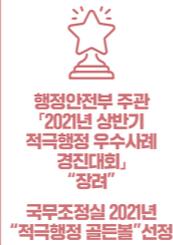


- 코로나19예방접종 센터 구축 간 시급성 문제 해소, 효율향상, 예산절감
- 888백만원(부산시 기준 추산) 예산절감 ※ 전국 적용 시 13,875백만원
- 재래식 방식을 탈피하여 소프트웨어를 보급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질 향상
-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관리소요 절감, 접종센터 내 업무효율 향상



전선번호가 깜빡이면 귀기 의심시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0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전국 표준 가이드 마련, 생명골든타임 확보!



추진배경

- 요양·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15. 9월) 되었으나,
 - * ①방화구획된 대피공간, ②거실에 접한 노대등, ③경사로, ④연결복도(통로) 중 하나
- 조사결과 대피공간 등의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형식적 설치 및 층별 수용 인원에 비하여 협소하게 설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 확인

해결노력

- ① 대피공간 설치현황 조사 및 피난안전성 평가 실시
 - 기 설치된 대피공간(총 34개소)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 설치구조 및 위치 등 기준 마련을 위한 화재·피난시뮬레이션 수행
- ② 전문가 회의를 통한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및 합리적 설치방안 도출
 - 소방기술사 초빙 전문가 회의 및 부산건축사회 방문 실무회의 개최
- ③ 가이드 시행 관련 유관부서(건축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업무 협의
 -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시설 인·허가 시 가이드 적용 협조 요청



- 향후 건축되는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 수행
 - 화재 시 수직으로 피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재실자를 고려, 빠른 시간 내 수평으로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안전환경 조성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

<p>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p> <p>건축물 내부의 안전구획된 공간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항에 구획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설치된 공간으로 방화성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p>	<p>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p> <p>건축물의 외벽에 부착하여 노출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발코니, 외벽 복도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 내부에 연결된 공간을 방화성능 등의 기준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을 포함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에 연결하는 통로로서 연안이나 후시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통로를 포함</p>
<p>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p> <p>건축물의 대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이동 편의법 시행규칙 제23조(장애이동 편의시설) 제4항 관련 통로표지(인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을 포함</p>	<p>인원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통로</p> <p>건축물 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동선을 넓혀서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연계건축 및 연계복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연결복도·통로를 포함</p>



부록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규제신고처

온라인(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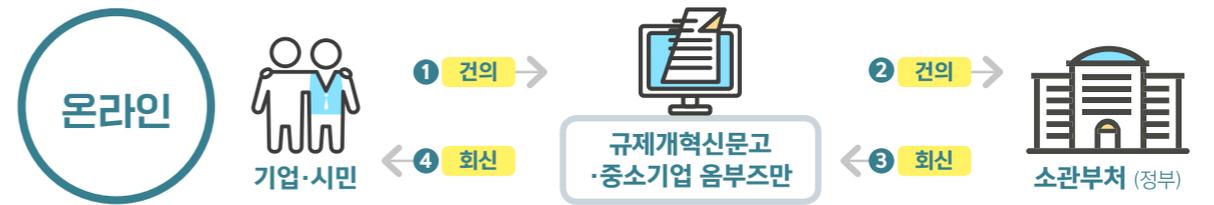


방문·전화

구분	방문	전화 (지역번호 051)
부산광역시(본청)	규제혁신추진단	☎ 888-2591~6, 2601~2604
중구	기획감사실	☎ 600-4016
서구	기획감사실	☎ 240-4032
동구	기획감사실	☎ 440-4034
영도구	기획감사과	☎ 419-4082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 605-4035
동래구	기획감사실	☎ 550-4042
남구	기획담당관	☎ 607-4036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4
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749-6222
사하구	기획실	☎ 220-4311
금정구	기획감사실	☎ 519-4032
강서구	기획감사실	☎ 970-4032
연제구	기획조정실	☎ 665-4034
수영구	기획전략과	☎ 610-4034
사상구	기획감사실	☎ 310-4032
기장군	기획청렴실	☎ 709-4032

규제신고 처리절차

중앙규제(중앙부처의 법령·인허가 행태 규제)



지방규제(지자체의 조례·규칙·인허가 행태 규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사전 컨설팅 감사란?

공무원 등이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대상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신청 방법



* 시, 구·군 등 감사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원 신청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통보 또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컨설팅 의뢰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TEL : 051) 888~2595



